

전남개발공, 강진환경산단 200억 손실 떠안나

감사원, 광주·전남북 7개 공기업 감사 결과 48건 적발

F1 인근 모텔 매입·광주도시공 침단체발 부적절 지적

전남개발공사가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토지에 대한 일괄매입 조건을 강진군의회로부터 승인 받지 않아 200억원대의 사업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또 장성행복마을 조성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43억여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등 광주·전라지역 7개 공기업 감사한 결과, 총 48건의 위반·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2010

년 8월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772억원)을 강진군 19%, 공사 81% 지분으로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2월 준공했다. 협약에는 분양공고를 낸 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면 강진군이 공사로부터 미분양토지를 일괄매입하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전남개발공사 담당자들은 미분양시 일괄매입 조건의 효력이 있으면 강진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협약내용에 의결 시점에 대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환경산업단지는 올해 4월 기준 분양율이 24.4%에 불과하다. 공사는 분양공고를 낸 지 3년이 되는 올해 7월14일을 앞두고 지난 6월 미분양토지 매입을 요구했

으나 강진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당장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강진환경산업단지 사업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수지 적자가 227억8000만원”이라며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손실 및 분양대금 회수 부진에 따른 공사채 상환 지연과 금융이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F1 경주장 인근의 모텔 3곳과 휴게소 1곳을 지난해 35억2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토지매입이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이들 모텔과 휴게소는 F1경주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 확인결과 경주대회의 소음도가 57dB(데시벨)로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보다 낮고, 3개 모텔의 국제정 신고 매출액은 F1경주장 착공 이전보다 착공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도시공사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문제점도 적

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사업비 1조217억원)을 2018~2028년 벌이기로 하고, 2015년 9월 광주시의회 사업 승인을 받은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최대 278%에 이르는 등 공사채 발행한도(부채비율 230%)를 초과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곤란한데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9년의 경우 부채목표비율을 초과한 1831억원의 자금조달이 곤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5960세대의 입주자 자격이 적정하지 확인한 결과, 입주자 자산·소득 기준 초과 7세대, 입주자가 사망한 세대가 44세대 등 총 51세대가 퇴거대상임을 확인하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쌀생산 조정제 ... 전남 재배면적 1만ha 축소

논에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유도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 하세요.”

전남도는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따라 내년에 1만ha 이상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공급 과잉현상을 없애는 대책이다.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꾸면 ha당 340만원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9년의 경우 부채목표비율을 초과한 1831억원의 자금조달이 곤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에서는 내년에 모두 360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을 들여 1만698ha 논에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전국 감축 목표인 5만ha의 21.4%, 올해 전남 쌀 재배면적 16만1216ha의 6.6%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 과잉이 생기지 않도록 사료 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위주로 전환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 정부 세무시행 지침이 확정되면 유관 기관들과 쌀 조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해 품목 선정, 종자 확보, 재배기술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 갯벌도립공원 161km²로 확대 추진

흑산면 제외 13개 읍면

신안 갯벌도립공원이 팔금·자은·임자면까지 확대·추진된다. 확대 지정되면 신안 갯벌도립공원은 군내 흑산면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10개 읍면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도립공원을 흑산면을 뺀 13개 읍면으로 지정·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확대 지역은 팔금·자은·임자면에 분포한 갯벌 18km²다. 흑산면에는 갯벌이 없어 공원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신안 갯벌도립공원은 기존 143km²에서 161km²로 늘어난다.

신안갯벌은 지난 2008년 증도 일부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처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10개 읍면으로 확대됐고, 이번엔 3개면이 추가로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신안군이 지난 8월 ‘갯벌도립공원 지정·확대 심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달 중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다음달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군과 주민들이 갯벌도립공원 지정을 바라고 있는데, 신안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어서 갯벌도립공원 확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갯벌도립공원은 신안갯벌을 비롯해 무안갯벌(37km²), 발교갯벌(23km²) 등 3곳이 지정·보호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내년 3월까지 대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1단계 1464호 대상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이 지시부진하다는 지적(광주일보 9월27일자 2면)에 따라 전남도가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대형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가능 농가는 3531농가다. 단계별로는 1단계 대상농가 1464호(41%), 2단계 272호(8%), 3단계 1795호(51%)다. 1단계 대상은 돼지 600m 이상, 소 500m 이상, 닭·오리 1000m 이상의 대형 축사 농가다.

적법화 불가능 농가는 375호로 개발제한구역 106호, 수변구역 50호, 가축사육제한구역 48호, 접도구역 29호, 기타 142호 등이다.

전남도는 1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을 연말까지 80%, 내년 3월24일까지 100%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중심이 되는 농가별 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점검계획을 세워 매월 부진 시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당면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홍보전단 추가 제작 배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발간 배포, 독려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확대할 골든타임”이라며 “축산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환경과 건축부서가 협조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늦출 수도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유예 기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서비스. 광주 북구청의 학교방문주민등록발급서비스가 진행된 12일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 고등학생의 지문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국 최초 생계비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관련자 315명 혜택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이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민주당·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조례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해 자료수집,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망자, 행방

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를 우선 지급대상자로 제한했다. 현재 확인된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사망자 9명, 상이자 32명이다. 나머지 274명은 무죄판결 등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5·18 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월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조례 통과 직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에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전남도의회는 설명했다.

우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조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 위로와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 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방향
 보라안과 병원 문귀형 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 원장 | 수완지구
 인 하루 치과 이광훈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 필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태영 21 병원

교촌과 함께 하는 제2회

순창 발효소스 경연대회

치킨과 발효소스의 맛있는 콜라보

2017. 10. 22 (일) AM 10:00

장류축제행사장 발효소스토글 원형 전시관

상금 200만원

순창군, 순창농업기술센터, 순창농업기술센터, 순창농업기술센터, 순창농업기술센터, 순창농업기술센터